

# 양돈장 폐수문제 중대현안으로 대두

## 장기저리의 시설자금 융자 긴요 양돈농가들의 인식전환도 필요

마야흐로 양돈장의 폐수처리 문제가 양돈업계의 중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과거 같으면 양돈장의 분노냄새는 농촌의 정취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었으나,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분노냄새 뿐만 아니라 분노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즈음 지난 1월 27일 용인 축협조합장과 본회 용인지부장이 이 지역 양돈농가를 대표하여 검찰에 구속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용인 뿐만 아니고 이전에서도 한 양돈인에게 배출허용 기준치 이상의 양돈폐수를 배출했다는 혐의로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전국의 여타 지역에서도 폐수문제로 양돈인들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청은 2월 16일 전국의 환경지청 및 시도와 협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304개

축산관련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이중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무허가업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로 배출한 업체 등 50개 업체에 대해 △ 폐쇄 △ 허가취소 △ 이전명령 △ 조업정지 △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청이 행정처분한 50개 업체 대부분이 양돈장들이어서 이제 양돈장의 폐수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이 환경공해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관련법규를 제정,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와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따라 환경청은 지난 '81년 환경보전법을 개정, 돈사면적 1,400㎡ 이상의 돈사시설에 대해 폐수처리시설을 의무화 한데 이어, '87년 4월에는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 돈사면적 500㎡ 이상 1,400㎡ 미만(특별청소지역은 250㎡ 이상 700㎡ 미만)의 양돈장에 대해 축산폐수 정화시설

“

**정부는 양돈장에 대한 폐수 단속에 앞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폐수처리시설  
자금을 일정 비율로 보조해 주거나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 국토 현실로 볼 때 환경오염문제는  
'90년대 나아가서는 2천년대가 다가올수록 점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앞서 양돈농가들이 한발 앞선 사고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해 금년 들어서 정부는 돈사시설 1,400㎡ 이상에만 적용하던 환경보전법을 두수 개념에 추가해 1,000두 이상 사육농가도 환경보전법을 적용받도록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예시한 바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표준설계도까지 작성·배포한 환경청이 6개월간의 지도계몽이 끝난 금년 1월부터 중규모 이상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양돈폐수처리에 있어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양돈농가들에게도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에 바탕을 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 양돈폐수처리 시설(기계식, 활성오니법 등)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시설, 기술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부가 작성·배포한 표준설계도에 의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500두 기준 1천만원의 설치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돈을 경영하면서 비생산분야인 정화시설에 1천만원씩 투자할 여력이 있는 양돈농가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돈장에 대한 폐수 단속에 앞서 농민보호차원에서 폐수처리시설 자금을 일정 비율 보조해 주거나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이 양돈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보조내지는 장기저리 융자해 주는 것은 본받을 만 하다.

반면, 우리 양돈농가들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폐수처리 문제에 접근하다가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향후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환경공해 문제는 계속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정화처리가 되지 않은 분뇨를 하천이나 농토에 흘려버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양돈업이 환경공해 주범이라고 매도를 당하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양돈농가 스스로 양돈폐수 처리시설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 국토 현실로 볼때 환경공해 문제는 '90년대, 나아가서는 2천년대가 다가올수록 점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앞서 양돈농가들이 한발 앞선 사고방식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취재 : 김동성)